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산악회에서 회비 인상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을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갑: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 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을: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1. 갑의 관점은 학급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회의 의사 결정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2. 을의 관점은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3. 갑과 을의 관점은 정치가 사회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4.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5.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와 B 모두 (가) 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 는 점에서 B와 구별된다.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B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B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면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만, A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청한다.

- 가. A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나. B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다. (가)에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X. (나)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요청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1. 가, 나
2. 가, 다
3. 다, 라
4. 가, 나, 다
5. 나, 다, 라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의 기관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임기 동안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도 끊임없이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의 기관은 표출된 국민의 의사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A를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 1.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3.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헌법 원리이다.
4. 국가가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5.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長)과 D의 장(長)을 임명한다.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D의 구성에는 C의 장(長), A, B가 모두 관여하며, C의 장(長)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E는 조직상 A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헌법 기관으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고, E의 장(長)은 B의 동의를 얻어 A가 임명한다.

- 1. B는 A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2.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3. X와 달리 X는 명령·규칙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4. D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5. E는 X에 대한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5.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A는 지방 자치법에서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B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인사 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 권한을 가진 A의 요청 없이는 B가 인사 청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기관인 A에 대한 B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1.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3. X와 달리 X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4. B와 달리 X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5.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공허한 것에 불과해지면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A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한 A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넘어 비경제적인 영역에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 배제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이다. X
- ② 기본권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절차적 권리이다. X
- ③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X
- ④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O
- ⑤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X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헌법 소원 심판 알아보기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구제 제도라는 본질을 가진다. 본래적 의미의 헌법 소원 심판인 A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 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법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B를 제청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 청구하는 C는 헌법 소원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A와 별도로 C를 헌법 소원 심판으로 규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A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B의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C는 형식적으로는 헌법 소원 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 하나인 B에 해당한다.

<보 기>

- ㉠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 ㉡ B와 달리 C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신문 기행 ○○○○년 ○○월 ○○일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갑은 지난 총선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달 □□법 개정안을 갑이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관련 사업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B는 □□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A에게 빠른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익적 사회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 ① A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실추를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X
- ③ A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X
- ④ B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O
- ⑤ B와 달리 C는 A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X

[9~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t시기와 t+1시기에 동일하지만, 을국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음은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내용이다.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9.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③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 ④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 ⑤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 ㉡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 ㉢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t시기와 t+1시기에 동일하지만, 을국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음은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내용이다.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1. 갑/을 국의 정부 형태 변화시키기
2. t시기(현행) 결과 산출
3. t+1시기 결과 산출

과반 정당 ≠ 행정부

→ ①국 : 대통령제

을국

t시기 : 대통령제 / 행정부 : b 당

t+1시기 : 지역구	a	b	c
지역구	52	45	8
비례	48	97	17 = 98
전국구	1	1	0
	101석	143석	25석

과반
⇒ 의내 → t시기(대) 행정부

9.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 ①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X ~ 의내
- ②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X ~ 의내
- ③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X ~ 의내
- ④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X ~ 의내
- ⑤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A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가.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 나.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 a 당
- 다.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르.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 t+1시기 지역구 ⑤에서 과반정당 존재.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르 ④ 나, 르 ⑤ 다, 르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하여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96	101	3	200	A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88	107	5	200	A 당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시기	구분	a 당	b 당	c 당	전체 의석수(석)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	지역구 의석수(석)	47	45	8	100	b 당
t+1	지역구 의석수(석)	52	37	11	200	a 당
	정당 투표 득표율(%)	48.8	33.7	17.5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시기와 t+1시기 모두 갑국에는 A~C 당만, 을국에는 a~c 당만 존재하고, 갑국과 을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없음.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한편,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t시기와 t+1시기에 동일하지만, 을국은 선거 제도를 개편하여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동일하지 않다. 다음은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의 내용이다.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1. 갑/을 국의 정부 형태 변화시키기
2. t시기(현행) 결과 산출
3. t+1시기 결과 산출

과반 정당 ≠ 행정부

→ ① 국 : 대통령제

을 국

t시기 : 과반 정당 X 이기에 (연립을 어떻게 한지도 모름)
 과반 X → ② 인 전체 될 수도?

t+1시기 : 지역구	a	b	c
지역구	52	45	8
비례	48	97	17 = 98
전체	100	142	25

과반
 ⊖ → 의내 → t시기 ②
 행정부

9.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X
- ②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X
- ③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X
- ④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
- ⑤ t+1시기에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10.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가.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지역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 나. t+1시기 을국 의회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 a 당
- 다. t+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르. t시기와 t+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 t+1시기 지역구 ②에서 과반 정당 존재.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르 ④ 나, 르 ⑤ 다, 르

11. 갑의 답변에서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권공평

제가 소유한 땅에 상가를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반려되었나요?

□□법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 관리 계획에 따르면 민원인 소유의 토지는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상가를 짓도록 허가하면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이라는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①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X
- ②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X 계약
- ③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O
- ④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계약
- ⑤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관계되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과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부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B에게 A(14세)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놀러 갔다. A가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자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A를 치어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도자기도 파손되었다.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서 다치게 하였다.

- ① A가 어항을 깨뜨린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E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 갔다가 잃어버리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찾아오라고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병,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을과 정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검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 ①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 ②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 ④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⑤ 검사는 정 절도 행위가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 2학년인 갑(17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 후 을과 적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 벌고 있던 갑은 귀가 중 정 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게시된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 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려고 정에게 ○○화장품을 광고의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은 5만 원인 □□화장품도 함께 구매해야만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건네자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 ①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 ④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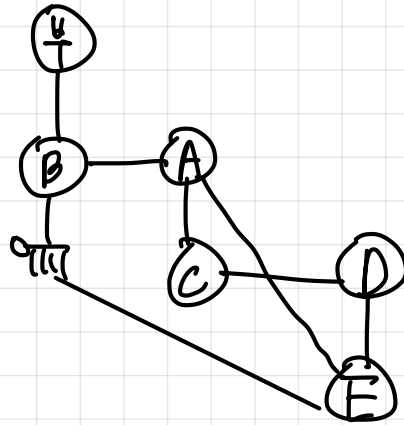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 했다는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 후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 고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①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갑이 ○○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와 □□ 고등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부모는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B에게 A(14세)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B는 자신의 반려견과 A를 데리고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놀러 갔다. A가 C 소유의 어항을 실수로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자 B도 반려견을 데리고 A를 쫓아 밖으로 나갔다.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는 C와 ○○도자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도자기를 배달하던 중 A를 보지 못해 오토바이로 A를 치어 다치게 하고 배달 중인 ○○도자기도 파손되었다.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옆에 있던 E를 물어서 다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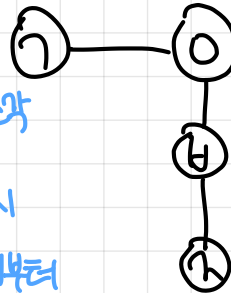


- ① A가 어항을 깨뜨린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A는 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②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X
- ③ B는 E에 대해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O
- ④ D가 E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하더라도,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X
- ⑤ E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X

→ 면책된다
→ 당사자들만 질 수 있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 갔다가 잃어버리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찾아오라고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은 병,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 이후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고, 13세인 병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을이 자신의 생명을 대한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은 절도 행위 당시에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을과 정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검사는 협박 행위를 한 갑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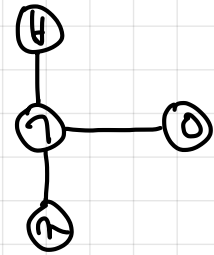
- ① 병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 X
- ② 검사는 을에 대하여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X
- ③ 수사 절차에서 을, 정과 달리 갑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X
- ④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X
- ⑤ 검사는 정 의 절도 행위가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

→ 책임조각
→ 책임조각
→ 유죄추정
→ 기소유예
→ 무죄추정
→ 기소유예 (유죄추정)
→ 기소유예 (유죄추정)

#인간사건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 2학년인 갑(17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그 후 을과 적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씩 받고 있던 갑은 귀가 중 정리의 화장품 판매점 앞에 게시된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려고 정에게 ○○화장품을 광고의 조건대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은 5만 원인 □□화장품도 함께 구매해야만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건네자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다.



- ①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X → 대리근로계약 금지
- ②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 법.대 동의
- ③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X → 청약 승낙
- ④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 용돈이러서
- ⑤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O → 용돈이러서

#성년자 복음(+노자)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로부터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육아를 이유로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이 근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A 회사는 갑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 후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갑이 공휴일 근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고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남녀 고용 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직원의 거부

중대
고등소

- ①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X → 대법(회사) 대신
- ②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X → 부당노동행위 일때만
- ③ 갑이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④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별도의 재판이(민사 소송)
-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와 □□고등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O

2법: A회사 ↑
중대: 갑 ↑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A국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 보세요.

갑은 A국 형법 제○○조 및 제□□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갑이 판사에게 "제가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판사는 "당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소. 인생을 낭비한 죄! 게다가 남을 모욕한 죄!"라고 하였다. 갑이 태어나기 전부터 A국 형법 제○○조는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는 '사람을 모욕한 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국 형법 제△△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_____ (가)

<보 기>

㉠. A국 형법은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성문의 형지일**

㉡. 제○○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인생 낭비의 기준?**

㉢. 제□□조를 적용하여 갑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 제△△조와 비교하여 제□□조는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인생 낭비 = 살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아는 학생끼리**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다.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총 5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갑과 을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병의 친생자인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몇 년 뒤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 하고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법원을 나서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현재 병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①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

②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다. X **(배우자만 가산)**

③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 X **(아는 원금 X (면대채무 위임))**

④ 갑과 을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동지)**

⑤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X **(친양자 입양 (친권에게 종속))**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전반적 복음**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의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 소유 고가의 화분을 집어 던져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 갑이 을과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갑을 폭행하였고, 갑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병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을은 항소하였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①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X **법원**

②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보외)**

③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다. **것으로 간주된다.** X **판결 확정**

④ 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X **(유언채권)**

⑤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을과 병에게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X **(공사채권)**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A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자 이웃 국가인 B국도 군비 지출을 늘려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 B국은 A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국제 사회에서 A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대응입니다. **현보주의**

을: B국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A국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가 나서서 A국의 군사력 증강이 B국에 대한 침략이 아닌 자위의 목적임을 확인하여 B국의 의심을 해소하고, A국과 B국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X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군사적 수단을 중요시한다. X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보편적 선(善)과 윤리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X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X **(현. ㉠의 긍정적 선 중앙정부 미존재 반영)**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전반적 복음**

갑국은 을국과의 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사법 기관인 A에** 제소되었다. 이에 A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 군인들이 전쟁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B는 해당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B는 병국의 **거부권 행사**로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보 기>

㉠. A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X **국가, 국제기구**

㉡.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X **이사국, 상임이사국**

㉣. B는 A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 **(4)**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